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한국 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 한 권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SSN : 2005-7008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 일자 2025. 7. 18.

발 표 **김한권**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토 론 **최진백**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양정학 육군사관학교 교수
천미성 외교부 동북아1과장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발행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집 **박명아** 연구원

발간등록번호 11-1262124-100038-0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한국 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CONTENTS

들어가며	01
한국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한중관계의 역사적 의미	03
한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구조적 도전요인의 증가	08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한국 정책 전망	12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	15

1. 들어가며

- » 2025년 6월에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명분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한중관계는 2016년 7월에 발생했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현안으로 인해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중관계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렀음.
- » 사드 배치라는 양자관계 냉각의 직접적인 사안이 존재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양국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 간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증가해 왔음.
 - 따라서 2016년 7월 이후 한중관계의 냉각은 사드 배치 현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으로 본다면 양자관계가 이미 갈등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 평가됨.
- »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를 거쳐 이제 ▲관계 재정립의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양자관계의 역사적 국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중관계 재정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한중관계의 역사를 국면에 따라 회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한중관계 재정립 국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 다음으로 이 보고서는 한중관계의 현황 분석과 평가를 통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 영역별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함.
 - 이어서 이 글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망되는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외교 ·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고자 함.
 - 끝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타날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가 한국에 미치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및 대응을 논의해 보고자 함

2. 한국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한중관계의 역사적 의미

2-1. 한중관계의 역사적 회고와 평가

» 한국 이재명 정부가 마주할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를 거쳐 이제 '한중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역사적 국면에 진입한 상황임.

- 한·중은 1992년 8월 24일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에 들어 수교 33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를 거쳐 이제
'한중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역사적 국면에 진입

» 한중관계는 분야별 차이 및 각 분야에서 발전과 퇴조를 보여 왔지만 전반적으로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경제·통상, ▲사회·문화, ▲정치·외교, ▲군사·국방 분야 등에서 크고 작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됨.

-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통상 분야의 한·중 교역액은 수교 당시인 1992년 약 63.7억 달러 ⇒ 2024년 약 2,729억 달러로 약 43배 증가함.
 - ▶ 한·중 무역액의 정점은 2022년 약 3,104억 달러¹⁾

1) 한·중 교역액의 통계에는 양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 측 한국무역협회 통계로는 2022년 약 3,104억 달러, 2023년 약 2,677억 달러, 2024년 약 2,729억 달러로 발표됨. 다른 한편으로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3,594억 달러, 2023년 약 3,107억 달러, 2024년 약 3,277억 달러로 나타났음.

-
-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중 인적교류는 2014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한류(韓流) 문화는 중국 내에서 꾸준히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음.
 - 반면 정치 및 군사·국방 분야에서는 북한과 한미동맹의 요인으로 인해 한·중 간 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으며, 더하여 최근에는 한·중 국민들 간 상호 호감도가 저하됨.

-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한중관계는 수교 당시와는 다르게 ▲중국의 종합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던 다양한 도전요인 및 한계점들이 나타나면서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국면을 맞이하였음.
- 따라서 한국은 한·중 사이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한편,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 구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중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기임.

2-2.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 변화

- 한·중 수교 이후 양자관계의 역사를 정리해 본다면 크게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재정립 시기의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한·중이 공식 선언한 양자관계의 발전은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 (노태우 정부),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 (김대중 정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 (노무현 정부),

▲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 (이명박 정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음.²⁾

- 이후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모색했으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에 거리를 둔 시기를 경험함.

» **(한중관계 발전기)** 수교 이후 한·중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정부 주도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관계에서 민간 분야로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문화, 정치·외교,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관계 강화를 추구했음.

» **(한중관계 조정기)** 발전을 거듭하던 한·중 우호 협력관계에서 점차 도전요인들이 발생하며 양국관계에서 흔들림이 나타나던 시기였음.

- 양국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로 한·중은 북한의 핵개발에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6자회담이 2003년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2005년 9월에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9·19 공동성명'이 발표됨.
- 반면 2000년 6월에 마늘 분쟁 사건³⁾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충돌한 사안이었으며, 또 다른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 내 반중정서가 고조됨.

2)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관계” 한중관계와 중국 (https://overseas.mofa.go.kr/cn-ko/wpge/m_1222/contents.do, 최종 접속일 2025년 5월 25일)

3) 한국 정부가 2000년 6월에 중국산 냉동미늘과 초산조제 미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사건임. 양국은 2000년 7월 31일 '마늘협상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중국은 한국 휴대폰의 수입중단을 끌고, 한국은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 2,000~3만 5,000kg의 중국산 미늘에 30~5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세이프가드 시한 또한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타결됨.

-
- 2008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 친강(秦剛)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2022-23년 중국 외교부장 역임)이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전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며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음.
 - ▶ 이러한 친강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에게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본격적인 시험의 무대에 오르는 신호탄의 역할을 함.
 - 하지만 동 시기 한·중 양국 정부는 협력관계의 틀을 깨지 않으며 갈등 상황을 관리하려는 상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2015년 9월에 중국이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증진을 추구했음.
 - ▶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승절 행사의 참석을 통해 이를 추동하려함.
 - ▶ 반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비판과 우려가 나타났음.

» (한중관계 갈등기) 수교 이후 점차 한·중 사이에 종합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2016년 7월 8일에 한국 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됨.

- 한국 내 사드 배치 협안 이후 중국은 직·간접적인 단체관광 금지와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실행함.
-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 ‘3불’ 입장표명⁴⁾을 계기로 2017년 10월 31일에 ‘한중

4) 한국의 ‘3불’ 입장표명은 2017년 10월 30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임. 당시 강 장관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음.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한·중이 공동 발표하며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중 우호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함.

- ▶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의 비핵·평화 구축의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함.
- ▶ 하지만 '대국과 소국(작은 나라)', '혼밥'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중국 저자세 외교에 대한 논쟁이 촉발됨.

- ▶ 한복, 김치 등 양국 국민들, 특히 네티즌 간 문화적 논란이 발생하며 한·중 간 상호 호감도가 하락함.
 - 윤석열 정부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역내 주변국들과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는 실질적인 협력도 특별한 갈등도 만들지 않는 '원만한 관리'를 유지
-

3. 한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구조적 도전 요인의 증가

» (정치 분야) 한중관계는 정치 분야에서 수교 이후 상호 끼인되어온 가치, 체제, 정체성과 관련된 도전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기반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에서 이들은 주요 도전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아왔으나,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가 새로운 도전요인들로 점차 부상하기 시작함.

» (경제·통상 분야) 한중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한·중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양자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도전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수교 이후 형성되었던 한·중 간 분업화 구조가 무너지고, 경제관계가 '상호 보완과 협력'에서 '경쟁' 구도로 전환됨.
 -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중간재 제품에 대한 중국의 기술 및 생산력이 증진되며 양국 간 협력 공간이 줄어들고 경쟁 산업이 증가함.
 - ▶ 중국 노동자 임금의 점차적인 인상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ASEAN 국가들로 이전함.
- 이에 더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첨단 산업에 대한 한·중 간 경제협력의 공간이 더욱 축소됨.
 - ▶ 첨단과학 기술 분야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며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전략적 압박과 견제를 강화함.

▶ 중국은 한국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왔으나,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자립 모색으로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군사·안보 분야)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가 나타나며 동 분야에서 한·중 간 도전요인들이 증가함.

○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해서 받아온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왔음.

▶ 연이은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 (deterrence)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 반면 중국은 한미 및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불만이 수면 하에서 누적됨.

▶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넘어 미국의 주도로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함.

○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 한일관계 개선 ⇒ 한·미·일 협력 ⇒ 한·중 협력 확대의 ‘단계적 접근’을 모색해 왔지만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수용이 불가했음.

▶ 만약 중국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역내 국가들이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중국에게 다가오더라도 중국이 결국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 이에 더하여 최근 ‘사실상 동맹관계’인 북·러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양자 차원에서 중·러 및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북한보다 미국에 맞추어지자,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감소함.
 - ▶ 단, 중국은 북·러 협력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북·중 사이에 국제정세의 신냉전 인식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차이가 존재함.

➤ (사회·문화 분야) 한·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2016년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 (THAAD) 배치 협안으로 인해 급속하게 감소한 이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

- ◉ 정치 분야의 가치, 체제, 정체성의 차이와 중국의 애국주의 및 사상 교육 강화에 더하여 단오절, 한복, 김치 등 연이은 문화적 논란이 한·중 양국 국민 사이에 발생함.
- ◉ 한·중 양국 국민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 Pew Research Center에서 2024년 7월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지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71%임. [c.f. 일본(87%), 호주(85%), 미국(81%), 필리핀(64%), 인도(52%)]⁵⁾
 -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2025년 6월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진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 인상이 66.3%, 긍정적 인상이 25.6%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상이 17.1%, 긍정적 인상이 77.5%와 비교해 본다면 부정적으로 표출됨.⁶⁾
 - ▶ 중국 또한 2016년 한국 내 사드 배치 협안 이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5) Laura Silver and Gar Meng Leong. Most People in 35 Countries Say China Has a Large Impact on Their National Economy. Pew Research Center (July 09, 2024).

6) 손열·박한수 편. “[EAI 여론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 (2025년 6월 12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단체관광을 포함한 중국의 대한국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한국인들과 문화적 논란을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증가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4.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한국 정책 전망

4-1. 중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정책 기조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우선적인 목표는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관리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 유지를 추구해 왔음.

- 우호 협력적인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은 한국을 ▲투자 및 기술 교류의 경제 협력 파트너, ▲대북관계 관리를 위한 지렛대 활용, 및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친중 또는 중립을 유도하려 함.
 - ▶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1970년대 말부터 공식적으로 실행한 이후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對한반도 정책**에서 남·북 한 간 균형 정책을 추구함.
 -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적대와 협력의 굴곡을 넘나든 대미관계를 관리하여 왔으며, 군사력을 포함해 종합국력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한반도에서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인식하며 역내에서 미국과 일정 수준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대한국 지렛대 및 대미 협상 카드로의 활용을 모색해왔음.
 -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교해 북한이 가진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분명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에게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상승 중임.
 -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만약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를 소멸시킬 수 있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 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북중관계의 굴곡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생명선’ 공급을 견지하고 있음.

4-2. 최근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

▶ 최근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는 크게 ▲국제사회,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의미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증가하고, 한미동맹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 (국제사회) 중국은 한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NATO의 주요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속하면서도 경제적 이익 및 지정학적 압박으로 인해 점차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이 확대되게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지역) 중국은 역내에서 전략적으로 우려하는 한·미·일 협력에 이어 3국 동맹의 등장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약한 고리’의 대상으로 한국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류운명공동체’를 앞세운 한중관계의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해 점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대북 억제력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고 있지만, 한·미·일 협력에서는 한국의 이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중 및 한·중·일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남·북 균형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의 대북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미국의 영향력 제한을 통한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활용하며 자신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한편,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국가로 평가됨.

- ▶ 나아가 북한은 2024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단행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중국은 남·북 균형정책을 견지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북한에 대한 견제 또는 압박의 지렛대 보유가 필요한 상황임.
-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보호하고, ▲한국을 통해 일정 수준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며, ▲채찍과 당근을 통해 한국을 점차 자국의 영향력 하에 끌어들인다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반도 정세의 무난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결국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자주적인 모습을 확대하고, 중국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교류에 나서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

5-1. 한국의 대중국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한·중 정상 간 방문 교류의 필요성

- » 앞서 언급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시기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는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 기조 하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원만한 관리’였음.
 - ‘원만한 관리’의 기조 하에서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동맹체계 흔들기에 따른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 관찰, ▲한중관계를 통한 대북한 지렛대 활용 방안 모색, ▲한·중, 중·일, 한·중·일 관계를 통한 동북아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 부상의 방지 등을 모색해왔음.
- »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 중반기부터 중국이 보여주었던 대한국 접근과 한·중 간 고위급 회담의 증가는 양자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중국 측의 접근은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을 목표한 것이기 보다는 ‘원만한 관리’ 차원으로 평가됨.
 -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며 한중관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증가해왔으며, 한·중 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상호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을 추구하는 접근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의 진행이 필요했음.
 -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만한 관리 차원의 접근이었던 관계로 인해 윤석열 정부 시기 실행된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무급 차원에서는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논의가 정체되거나 성과를 이루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논의와 결정이 필수적

» 중국 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논의와 결정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2025 경주 APEC 정상회담과 2026 중국 APEC 개최 연계)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가능한 선에서 한국사회의 우호적인 반응과 시 주석 방한의 명분을 쌓으려는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은 이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중국의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양자관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방한 명분 쌓기’에 국한될 수 있음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함.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중국의 기대) 한국에서 새로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한·중 상호 방문의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한층 증가했음.

- 중국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한국 정치에서 진보적 색채의 정부가 보여주었던 미국에게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확대, 그리고 우호적인 대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 사이에 증가되어온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한 양국 최고 지도자 간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중요한 기회임.

(나) 신냉전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방지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 » 최근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 인식과 동북아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에 대한 북·중 간 이해관계의 차이 및 전략적 불신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동·사안 관련 한·중 간 공동 이익의 공간 확대가 필요함.
- » (북·중 간 국제질서의 신냉전 인식 차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국제질서의 신냉전 인식에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 김정은은 2008년에 “새로운 랭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고 언급한 이후, ▲2021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2022년 12월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2023년 9.13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달 26-27일 사이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 연설 등을 통해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에 대해 강조하며 핵무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함.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연설,⁷⁾ ▲2023년 3월에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개최되었던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⁸⁾ 등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직접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명함.
- »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자, 북·중 사이에는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한 뚜렷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나타났음.
 - (북한)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강조해왔던 김정은 체제는 2023년 들어와 ▲7.27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북한은 전승절로 명명)에 중국과 러시아의

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七次峰会第一阶段会议上的讲话 (全文)” (2022年11月15日).

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3年3月22日).

대표단을 초청하여 북·중·러 협력 모색, ▲9.13 북·러 정상회담, 2024년 6월에 푸틴의 방북 및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단행함.

◉ (중국)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미·중 간의 주요 현안에서 자국을 지지하고 중·러 및 북·중의 양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은 환영하나, 다자적인 중·러·북 협력의 강화 움직임은 미국에게 한·미·일 협력 강화의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 또한 중국이 가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존재함.
- ▶ 2023년 9월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3 북·러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한 논평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안배(朝俄之間的安排,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다)”로 언급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표출함.⁹⁾
- ▶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2024년 6월 19일에 열린 김정은-푸틴 회담에서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자, 중국은 동 회담 다음날인 20일에 린지엔(林劍)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북·러 협력과 조약 체결은 “북·러 사이 양자 협력의 일이며, 나는 평론하지 않겠다(朝俄之間的雙邊合作事宜，我不作評論)”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견지함.¹⁰⁾
- ▶ 중국은 다자외교와 대국외교를 통해 북한과 신냉전 인식과 동북아 진영화 구도에 대한 시각 차이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중관계는 물밑에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증가함.

➤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이 강화된다면

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9月1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9月12日).

1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年6月20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4年6月20日).

중국은 한반도에서 느끼는 전략적 영향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한편, 한중관계를 통해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

- ◉ 한국은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와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해 한·중이 함께 반대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한·중은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 가능성에 대응해 한·중 및 한·중·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음.

(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 하 한반도 전략의 실행 인식

- » 한국은 중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우호적인 대한국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지역 전략의 실행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실행하며 ▲남중국해에서 구단선 주장과 인공섬 건설, ▲타이완 해협에서 중간선 불인정, 그리고 ▲서해 상 '잠정조치구역(PMZ)' 내 구조물 설치 및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진입 등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 모색과는 구분하여 대한국 정책의 상위 개념인 중국의 지역전략 차원에서 계속 실행될 것으로 전망됨.

5-2. 신정부의 대중국 정책 제언

(가) 한국 대중정책의 기본 틀 확립

- »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한국 대중정책의 기본 틀이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한국 대중정책의 기본 틀이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증진'임을 확인하고 견지

증진'임을 확인하고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대중정책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유연한 전략적 위치 조정을 통한 실용외교에 바탕을 둔 국익 극대화 추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 특히 한국 신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와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함.
 - ▶ 단, 한국의 국익에 대한 개념이 정부의 정치적 색채에 따라 외교적 접근,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향후 국익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나)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와 유연한 조정

»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 추구)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공고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은 분명히 필요하나, 미중관계가 경쟁과 대화의 병행국면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미·중 사이 EU의 ‘전략적 자율성’ 또는 ASEAN이 추구하는 ‘전략적 탄력성(strategic resilience)’관련 한국 내 논의의 개시가 필요한 시기임.

- 한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미·중 간 주요 현안별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동맹의 공고함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논의를 검토해야 함.
 - ▶ 이와 관련하여, EU의 ‘전략적 자율성’의 논의를 참고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EU와 미·중 사이 주요 현안들에 관해 논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이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등의 대미 및 대중외교 행보, 그리고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

»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 사실임.

- 하지만 향후 한국이 미국에게 대중국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된 대미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유연한 경계 조정)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며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며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

- 한국이 마주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필요함.

- 단,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아닌 ‘자강(自強)’을 의미하는 ‘내적 균형’의 미진함을 채우는 ‘외적 균형’으로서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략적 자율성’과 장기적인 한국의 ‘자강’ 계획 수립에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작권 회수 및 미래전을 준비하는 군사력 증강 계획을 포함해,

11) Ha Nguyen. “Vietnam’s ‘Bamboo’ Diplomacy Hailed for Balancing Between US, China” VOA (January 05, 2024); “Vietnam’s ‘bamboo diplomacy’ shifts into higher gear” Reuters (March 7, 2024); 유현정. “미중 사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협안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96호 (2024.09.09).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수출입 다변화의 추구가 필요함.

▶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함.

(다) 한국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와 활용

»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양자외교는 물론 이에 더하여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 특히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EU, ASEAN,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
- ◉ 또한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합의한 가치, 정체성, 국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중 양자관계에서의 민감한 현안들을 다자외교를 통해 ‘제한적 손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함.

» ('가치'관련 다자와 양자외교의 구분된 접근) 한국은 대중정책과 관련하여 가치와 정체성 중심의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양자외교에서는 '가치'와 '주권'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가치, 체제,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필요함.
- ◉ 하지만 한·중 양자관계에서는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타이완 현안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제된 메시지 관리와 현안에 따른 세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 중국의 비판과 직/간접적 제재를 고려한다면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다른 자유 진영국가들과 함께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는 모습이 필요함.

-
- ▶ 반면 한·중 양자외교에서는 ‘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잡으며, ‘가치’와 ‘주권’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라)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 대응

» (정례적인 한·중 전략대화 채널 구축)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도전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한·중 간 다양한 전략적 채널의 재개와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한·중 전략대화 채널의 확대는 물론 무엇보다도 채널의 ‘정례화’가 관건임.
- 수교 이후 한·중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이 구축되었지만 갈등기에 접어들며 한·중 사이에 국익의 충돌 또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간 구축되었던 전략대화 채널이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개최되었음.
- 이로 인해 양국 간 시각의 차이와 갈등을 관리할 적절한 시간을 놓치거나 대화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
 - ▶ 특히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사이의 전략대화 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함.

다양한 한·중 전략대화 채널의 확대는 물론 ‘정례화’가 관건

» (타이완 해협과 양안관계의 분리 접근) 한중관계에서 한국은 ▲양안관계와 ▲타이완 해협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며 최근 타이완 해협이 역내 ‘화약고(flash point)’로

부상했으며, 한중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국내문제인 양안관계에 대한 한국의 내정 간섭으로 해석하고 있어 한·중 간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한국은 ▲양안관계에서는 수교 이후 한국의 일관된 입장인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은 한국에게 남중국해와 함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관련된 현안으로서 국제법과 질서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폐기와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지역전략 차원에서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 나타나는 회색지대 (gray zone) 전술이 서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중 해상 경계획정 협상을 촉진해야함.

➤ (새로운 한·중 경제 협력의 틀)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경제 협력의 틀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개방을 모색해야 함.

- 의료·보건, 미용, 엔터테인먼트 사업, 게임 등의 시장 개방 요구
- 안정적인 한·중 산업 공급망을 위한 한·중 경제 협의체 구축

➤ (지방 대 지방 교류 확대) 한·중 간 중앙 대 중앙정부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 대 지방 교류를 통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틀에서의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특히 발전이 뒤쳐진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방 대 지방 차원의 경제 협력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 중앙정치의 고위 지도자들이 발전이 더딘 중·서부 지역에서 지방 지도자로서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경우가 많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 교류 확대)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에 민감한 도전요인들이 존재한다면 민감도가 덜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단, 중화문명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K-Culture 및 중국 내 '한류'의 인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 이로 인해 한국 측에서 요구해 온 직·간접적인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에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한국은 한한령 해제의 요구와 더불어, 정치적 부담이 적은 동양화, 서예, 바둑 등의 정기적 교류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민족주의적인 반감과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한·중 청소년 및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리더들 사이의 교류가 필요함.

▶ 한중관계와 같이 가치와 체제가 다른 공동체 간 깊이 있는 상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양자 간 실질적인 상호 협력과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

● (한·중 고령화 사회 진입과 중장년층 교류) 한·중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층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중·장년층 세대의 인적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의 확대가 필요함.

▶ 특히 한국은 기초 과학 분야와 더불어 중국과 AI, 양자컴퓨터,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connected car) 기술 등에서의 전문가 교류가 필요한 국면임.

CONTRARIA SU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